

‘유튜브 증권방송’ 규제나선 당국 증권사 “동영상도 재깍” 부글부글

준법감시인심사필 등 인증 받아야
리포트 기반 영상도 ‘과도한 규제’
금투협 “새로운 가이드라인 만들 것”



각 사 유튜브 채널 화면.

금융당국이 증권사의 유튜브 채널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증권사들이 마케팅 수단으로 유튜브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가운데 주식종목 추천 등 실질적인 투자자문에 대해서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14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이달부터 증권사가 제공하는 유튜브 동영상에도 심사를 거쳐 ‘준법감시인심사필’ 일련번호를 제공한다. 금투협이 해당 동영상을 심사한 결과 증권사 광고 등 규정을 어기지 않았다는 인증이다.

그동안 증권사들은 각 회사의 유튜브 채널에 동영상을 올릴 때 아무런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A증권사가 지난 3월 올린 종목 추천 동영상에는 “본 방송에서의 개별 종목에 대한 추천, 매도, 매수의견은 증권사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니다”라며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의 판단”이라고 명시했을 뿐이다. 또 다른 증권사 역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영상은 고객의 주식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다”고 경고문구만 띄웠다. 금투협은 물론 증권사 내부통제 심사를 통과했다는 인증도 없었다.

증권사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2만명을 넘어서고 동영상 조회수가 수 천회에 달하는 등 영향력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이같은 문제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달 금투협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사들이 올린 동영상에 투자 정보가 포함됐을 경우 반드시 내부통제를 거치고 준법감시인심사필 등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게 요지다. 광고성 영상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금투협은 이 같은 내용을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회원사에 알렸고, 이달부터 키움증권, 신한금융투자, 삼성증권 등은 유튜브 동영상에 ‘준법감시인심사필’ 날짜와 인증번호를 명시하고 있다.

증권사의 유튜브 채널 규제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여전히 대다수의 증권사들은 금투협으로부터 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고수 중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보통 유튜브 동영상



키움증권은 지난달부터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하는 동영상에 금융투자협회 심사 취득 여부를 공개하고 있다. /키움증권 유튜브 채널 캡처

상의 종목추천은 이미 발표된 리포트를 토대로 이뤄진다”면서 “해당 리포트는 이미 준법감시인심사를 통과했고, 이걸 영상화한다고 또 다시 심의를 받으라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반박하고 있다.

증권사 측은 회사 자체가 준법감시인심사필을 취득했다면 내부 심의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한국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등은 동영상에 회사 자체 준법감시인심사필 여부를 공개하고 있다.

반면 금투협 관계자는 “이미 공개된 리서치보고서라도 영상으로 재구성될 때 내용이 바뀌거나 가감될 수 있다”면서 “동영상 방송도 준법감시인심사필 취득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증권사 별 온라인 동영상에 대한 표준내부통제기준 역시 아직

제각각이다. 금투협 내부통제기준 가이드라인에도 관련 규정이 없다.

현재 증권사에서 제작하고 배포하는 영상은 투자광고로 분류돼 금투협의 심사를 받고, 심사필을 취득하는 게 필수다. 하지만 유튜브 동영상과 실시간 방송에 대한 심사는 아직 관련 법규가 없다.

증권사들은 유튜브 채널에 올리는 종목 추천 영상 등을 투자 광고가 아닌 애널리스트의 ‘투자 의견 제시’로 분류해 금투협의 심사를 피해왔다.

금투협 관계자는 “유튜브가 새로운 플랫폼이고 아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증권사들과 많은 논의가 필요한 것 같다”면서 “조만간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손습기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윤종규 KB회장 “생체정보, 금융결제원과 분산보관… 정보유출 없애”

>> 1면 ‘바이오 금융시대…’서 계속

국민은행은 암호화된 생체정보를 금융결제원과 분산보관해 정보유출 우려를 없애기로 했다. 암호화했기 때문에 바이오정보만으로는 개별 고객 식별을 할 수 없고, 분산관리로 금융회사가 고객의 바이오정보를 오남용할 가능성을 차단했다. 본인인증을 할 때 두 기관의 보관 정보를 결합해 일치 여부를 식별한 후 등록이 완료되면 그 이후에는 거래금액이나

횟수에 제한없이 돈을 찾을 수 있다.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아 고객 관점의 사고와 행동을 바탕으로 디지털 혁신을 이루기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은행은 50개 점포에서 서비스 시범 실시 후 하반기에 전국 영업점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비밀번호 분실 우려가 높은 고령층 고객에게는 창구 거래 편의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허인 KB국민은행장은 “디지털 금융강화를 통해 어떤 순간 어느 장소에서나 고객이 원한다면 KB국민은행과 연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금융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혁신을 통해 사람 냄새나는 고객중심 경영을 실천하는 은행이 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예금지급시 통장, 인감 확인 의무를 삭제하는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예금지급시 본인 확인을 위한 내부통제 기준 마련의무를 규정할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기존 규제를 면밀히 점검해 개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속도감 있게 개선해 나가겠다”며 “법령 개정 및 실제 시행시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경우에는 유권해석이나 비조치의견서를 적극 활용해 규제측면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



최종규 금융위원장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을 방문해 정맥인증 출금서비스를 시연하고 있다.

제로페이

작은마트

콜센터 1670-0582
www.zeropay.or.kr

소상공인은 결제수수료 0%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공공시설 이용 시 할인혜택 등

가맹점 신청 안내

신청대상
• 사업자번호를 가진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도박, 사행성 등 일부업종 제외)

적용 수수료율

| | | |
|----------|---------|-------------|
| 소상공인 가맹점 | 연매출액 | 8억원 이하 : 0% |
| | 8억~12억원 | 0.3% |
| | 12억원 초과 | 0.5% |

▶ **일반 가맹점** : 신용카드 수수료보다 낮은 수준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제로페이 홈페이지(zeropay.or.kr)에 접속하여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지방청,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에 비치된 가맹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신청서 수령** : 신청서 작성·제출

▶ **가맹점주 앱 설치** : QR코드 발송

소비자 이용 안내

소비자 앱 설치

• 기존 은행 및 간편 결제 앱을 이용하거나 신규 설치 → 이용동의 → 본인인증 → 비밀번호 - 결제계좌 등록 → 완료

▶ **가맹점 QR 결제 방식**

- 소비자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결제 앱을 실행해 매장에 비치된 QR코드를 촬영한 후, 금액 및 비밀번호 입력하여 결제

▶ **소비자 제시 QR 결제 방식**

- 소비자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결제 앱을 실행해 QR코드(바코드)를 생성한 후 제시하면 매장의 POS 등을 이용하여 결제